
주요 금융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2019. 7. 5.

금융위원회

순 서

I. 정부출범 당시 금융여건	1
II. 그간의 정책 추진 노력	2
III. 우리 금융에 나타난 변화의 모습	9
IV. 향후 중점 추진 과제	13
[별첨1] 하반기 정책금융 지원과제	16
[별첨2]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현황	18
[별첨3] 주요 정책 사례 상세내용	19

I. 정부출범 당시 금융여건

①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요인 상존

-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부채가 빠른 증가세 지속*
 - * 은행 대출/주담대 증가율(%) : ('14년) 8.0/**11.0** → ('15년) 8.5/**9.9** → ('16년) 9.5/**10.2**
- 가계부문 자금쏠림이 심화되는 가운데, 부동산임대업·담보대출 중심의 여신관행*으로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애로
 - * 중기 대출유형(중기중앙회, '17년) : 부동산담보·보증 64.8%, 신용대출 35.2%
-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려 제기
 - * 가상통화 거래과열,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美·中 무역분쟁 심화 등

②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적 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포용적 성장' 달성을 위한 금융의 적극적 역할 요청
- 채무연체자, 자영업자, 고령·청년층 등 계층별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집중*
 - * 포용적 금융의 외연확대를 위한 정책역량 집중 필요(대국민 심층 인터뷰, 갤럽)

③ 금융산업의 신뢰 확보를 위한 혁신과 쇄신 필요성 제기

- 불공정 영업관행, 지배구조 투명성 부족 등으로 금융신뢰 저하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핀테크·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부문 新산업 육성, 금융 규제혁신* 등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
 - * (예)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혁신적 I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제정 등
- 특히, 혁신적 사업자 진입을 통한 경쟁촉진 필요성도 긴급요

Ⅱ. 그간의 정책 추진 노력

◇ 정부출범 이후, 금융이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을 흔들림없이 지속 추진

① 일관된 금융혁신 추진을 위해 4대 전략, 32개 과제 마련 ('18.1월) → 모든 과제의 추진계획 발표 후 본격 이행 중

※ 금융혁신 추진방향 : 4대 전략 + 32개 과제

① 금융채신	▶ 금융그룹 감독방안 안착 ▶ 회계개혁 추진 등
② 생산적금융	▶ 혁신모험펀드·성장지원펀드 출범 ▶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등
③ 포용적금융	▶ 취약·연체차주 부담 완화 추진 ▶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신규기구 설립 ▶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방안 마련 ▶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등
④ 경쟁촉진	▶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강화 등

② 금융혁신의 체감도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 등 현안대응을 위한 보완과제 마련('19.3월, 금융위 업무계획)

- 확고한 금융안정의 기반 위에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고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 구축 노력에 박차

※ 금융위 업무보고 : 4대 전략의 큰 틀에서 경제활력 뒷받침,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한 20개 보완과제 추가

① 경제활력 뒷받침	▶ 주력산업(자동차부품·조선업) 경쟁력 제고 ▶ 혁신·중소기업 자금지원체계 개편 등
② 핀테크 등 금융혁신 가속화	▶ 핀테크 혁신 집중지원 및 성과 확산 ▶ 금융산업·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 제고 ▶ 그림자규제 정비 등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개선 등
③ 소비자 중심 금융시스템 구축	▶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마련 ▶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 자영업자·고령층·청년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확대 등
④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등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등 금융안정 대응 강화 ▶ 불법사금융·금융사기 엄정 대응 ▶ 상시적·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가속화 등

①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하여 **공고한 금융안정 확보**

①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가계부채 리스크로 인한 우리 경제의 소비·성장 제약요인 해소

- ▶ 규제지역 LTV·DTI 강화 등 「**8.2 주택시장 안정대책**」 마련('17.8월)
- ▶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新DTI, DSR 도입 등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마련('17.11월)
- ▶ **다주택 보유자의 대출을 통한 추가 주택구입 제한** 등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마련·시행('18.9월)
-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소금융권 관리지표**로 도입(은행 '18.10월 비은행 '19.6월)

【 9.13 부동산대책에 대한 IB 평가('18.9월) 】

- √ 단기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BoA)
서울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충분한 강력한 대책**(HSBC)
금융리스크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Citi)

【 IMF 미션단장 브리핑시 가계부채 관련 발언('19.3월) 】

- √ 가계부채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 **한국의 거시건전성 조치들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 한국이 다른 국가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
타이트한 거시건전성 조치들이 있기에 **가계부채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② 금리변동 등에 대비하여 **취약·연체차주 부담경감**에 주력

- ▶ **①연체가산금리 인하**(3%p내, **소 금융권** '18.4월, **대부업** '19.6월), **②변제순서선택권** 부여, **③원금상환유예제도** 등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발표·시행('18.1월)
- ▶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증자리론 공급('18.5월)
- ▶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19.3월)
- ▶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금리 2%대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출시('19.5월)

③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 안정화**

- ▶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대책** 마련·시행('17.12월)
→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은행 자금세탁방지 의무강화 등
- ▶ **금융위원장**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 및 투기위험성 경고('18.1월)

④ 최근 규모가 급증한 **非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 추진

-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10대 잠재취약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19.1월)
* RP시장, 채권대차시장, 전문투자형사모펀드, MMF, 자산유동화,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증권사 채무보증·대출, 보험사 환헤지 관리, 여전사 자금조달, 비은행금융회사 부동산금융
- ▶ **RP시장 개선방안**, 보험사 외화자산 투자관리방안 등 마련('19.3월)

② 혁신·新성장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

① (창업) 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청년 창업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환경 조성

- ▶ 금융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18.4월)
- ▶ 국내 최대 청년창업 보육 플랫폼인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 착수**(‘19.7월)
- ▶ 유망 스타트업 안착 등을 위해 ‘19년부터 **5년간 총 190조원** 정책자금 지원 추진

② (성장) 창업·혁신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 ▶ **성장지원펀드 8조원**(3년간) 조성계획 마련·추진(‘18.3월)
- ▶ **코스닥 상장기업 스케일업 펀드**(총 3천억원) 조성(‘18.5월)
- ▶ 창업기업 자금조달 창구인 **클라우드펀딩 모집한도 확대**(7→15억원)(‘19.1월)

③ (회수) 코스닥·코넥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용한 혁신·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투자회수 기능 제고

- ▶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상장요건 개편 등 **코스닥 시장 활성화 추진**(‘18.1월)
- ▶ 코스닥 시장 신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스닥 벤처펀드**(3조원) 조성
- ▶ 코스닥 이전상장 활성화 등 **코넥스시장 기능 강화***(‘19.1월)
 - * 개인투자자 진입장벽 완화(예탁금 1억원→3천만원), 코넥스기업 소액공모 허용 등
- ▶ 자본시장 저변확대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19.1월)

④ (금융중개기능 확대) 생산적 자금흐름 확대를 위해 금융권 자본규제를 개편하고, 동산·기술금융 활성화 기반 마련

- ▶ 생산적 분야로 자금흐름 촉진을 위해 **금융업 자본규제 개편 착수**(‘18.1월)
 - * 고위험주담대(LTV 60% 초과)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가게·기업부문 가중치 차등 예대율 도입 추진, 가게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추진 등
- ▶ **동산금융·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18.5월~)
 - *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운용체계 개편(제조업→모든 업종으로 이용기업 확대 등), 기존 스마트 동산담보대출 및 신보 동산담보대출 특례보증 신설 등
- ▶ 지식재산(IP) 평가체계개선 등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추진(‘18.12월)

③ 전통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선제적 혁신 지원

① 자동차부품, 조선산업 자금애로 해소 적극 지원(총 4.6조원)

- ▶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18.12월)
* 우대보증(1조원), 회사채발행지원(1조원), 만기연장(1.3조원)
- ▶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18.11월)
* 제작금융 상생보증(0.1조원), 만기연장(1조원) 등

②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지원 등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3년간 총 15조원)

- ▶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중견기업의 주력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 투자에 3년간 10조원 공급(산업은행 7조원, 기업은행 3조원)
- ▶ (환경·안전투자) 기업현장의 산업재해·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3년간 5조원 공급(산업은행, 기업은행 각 2.5조원)

③ 기업구조혁신펀드 등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 ▶ 8개 은행, 캠코, 성장금융이 5천억원 출자 합의('17.12월) → 자동차부품업체(서진산업, 1호 투자기업)를 시작으로 투자 개시('18.11월~)

④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등 소비자 중심의 금융 구축

①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을 통해 연체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

- ▶ 법정최고금리를 27.9% → 24%로 인하('18.2월)
- ▶ ①범부처 일제단속('18.2월~4월), ②고금리 차주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강화, 등 최고금리 인하 보완방안 발표('18.1월)
-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설립('18.2월)

② 서민금융 지원의 효과성,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서민 금융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zu 주력

- ▶ 지속가능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발표('18.12월)
* 서민자금 공급체계개편,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안정적 재원확보 등
- ▶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추진('19.1월, 서울회생법원 MOU체결)
- ▶ 상각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감면율 상향('19.3월, 30~60%→20~70%)
-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18년 중 1,937억원 지원)

③ 자영업자·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중신용자 중금리 대출 공급 대폭 확대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

- ▶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 (우대수수료 적용범위 확대) 연매출 5억원 → **30억원 이하**(‘19.1월)
 - (PG하위사업자 등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이 아닌 **온라인사업자, 개인 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 적용(‘19.1월)
 - (신규환급) 신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환급, ‘19.9월 예정)
 - (밴수수료) 정액제→**정률제**로 개선하여 소액다결제 업종 수수료 인하(‘18.7월)
 - (맞춤형 자금지원) **초저금리 대출**(2조원, 기업은행) 출시(‘19.1월)
- ▶ 중·저신용자 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18.10월)
 - * 사잇돌대출 공급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 등
- ▶ 2금융권 이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 완화(‘19.6월)
- ▶ 주요 서민대출이용자 및 사회취약계층 등 서민 **ATM 수수료 면제**(‘18.4월)
- ▶ 서민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ISA 제도 개선**(‘19.1월)
 - **ISA 중도인출 허용** 및 서민형 ISA **비과세한도 확대**(200만원→400만원, ‘18.1월)
 - ISA **가입기한 연장**(‘18년말 → 21년말) 및 **가입대상 확대**(‘19.1월)
- ▶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19.1월)
- ▶ 병사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비과세) 출시(‘18.8월)
- ▶ 숨은보험금을 쉽게 확인 찾아갈 수 있도록 **통합조회시스템**(내보험찾아줌) 구축(‘17.12월)

④ 소비자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생활밀착형 과제를 추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 마련·발표

- ▶ 소비자중심 금융개혁 추진방안 발표(‘17.9월)
- ▶ **현장메신저 위촉**(‘18.2월, ‘19.2월), **금융소비자 옴부즈만 위촉**(‘18.3월)
- ▶ 현장 업무관행 개선 등에 중점을 둔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마련(‘19.4월)
 - * 고객 서류제출 부담 완화,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제도 개선 등 → 동 방안 집행을 위한 ‘범금융권 T/F’ 구성·운영중(‘19.5월~)
- ▶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확대 도입방안 발표(‘19.5월)
 - *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카드이동 서비스, 제2금융권 숨은금융자산 찾기

5 원칙이 바로 **신뢰의 금융** 기반 마련

① 금융그룹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등 마련

- ▶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방안** 마련('18.1월) →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기준(초안),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초안) 발표('18.6월)
- ▶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시범적용('18.7월 시행, '19.7월 1년 연장)
-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18.3월)
 - * 2금융권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 금융회사 임원 선출절차 투명성 강화,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공시 및 보수투명성 강화 등
- ▶ 은행권 채용실태 일괄 점검, 은행권 채용모범규준 시행('18.6월)

② 국내 기업회계의 대내외 신뢰제고를 위한 회계개혁 추진

- ▶ 외감법 **전부개정법률**(“회계개혁법”) 공포('17.10월) 및 하위규정 전부개정('18.10월)
 - * 유한회사(예: 구글 등 외국계기업) 외부감사 의무 부과, 상장사 외부감사인을 9년마다 정부가 지정, 상장사 외부감사인을 금융위 등록 회계법인으로 제한 등
- ▶ 회계감리 변호사 입회권 도입 등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18.2월)
- ▶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18.10월)
- ▶ 사전예방 중심 회계감독 등을 위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19.6월)

③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특사경 등 조사체계 정비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 마련('19.4월)
 - * (조직) 금감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 (담당업무) 증선위원장이 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하여 검찰에 통보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처리
- ▶ 특별사법경찰 운영,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국민권익보호 조치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19.5월)

④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등 내실있는 주주권 행사 지원

- ▶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마련('19.4월)
 - *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 주총 소집기간 연장, 주총 분산 개최 의무화 등
- ▶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 해소
 - * 스튜어드십코드 법령 해석집 배포('17.6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관련 질의회신('18.3월)
-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19년)
- ▶ 공적연기금 등의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의결권 위임 허용**('19.1월)
- ▶ 주요 경영사항 관련 정보를 명절 등 연휴 직전 공시한 기업 명단 공개(→ 올빼미 공시 근절 추진, '19.5월)

⑥ 핀테크,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권 경쟁과 혁신 가속화

① 금융부문 샌드박스 도입, 혁신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경영 주도 등을 위한 금융규제 혁신을 차질없이 이행

-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19.4월) 후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 혁신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확대(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19.1월)
- ▶ 행정지도, 모범규준 등 그림자규제 일제 정비 추진('19.5월)

② 전문화·특화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해 금융권 경쟁 촉발

-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18.5월)
- ▶ 금융업권별 경쟁도 평가 실시 → 인가 순차 착수
 - * 보험업·부동산신탁업('18.9월), 은행업('18.11월), 증권업('19.4월), 저축은행업('19.7월)
- ▶ 금융업 진입요건 완화를 위한 법규 개정 추진
 - (보험) 소액단기보험회사 자본금 요건 완화(보험업법 개정 추진, '19.2월)
 - (증권)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 마련('19.1월)
 - * 자본금 요건 5억원,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하지 않는 등록으로 진입 등

③ 핀테크,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분야 新산업 육성

- ▶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마련('18.3월)
-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추진('18.5월)
 - *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프로파일링 대응권, 금융권 정보활용 상시평가제 등 도입
-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발표('18.7월)
-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18.11월)
- ▶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발표('18.3월)
 - *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핀테크 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 등
- ▶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등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19.1월)
- ▶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발표('19.2월)
 - * ①사업자가 은행과 제휴 없이도 이체·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
 - ②이용자 인센티브 부여(세제혜택, 대중교통 및 해외결제 지원 등)
- ▶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및 오픈 행사 개최('19.6월)
-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 발표('19.6월)

Ⅲ. 우리 금융에 나타난 변화의 모습

①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금융 불안요인을 안정적 관리

❶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13년(5.7%) 이후 최저인 5.8%

* '19.1월 가계대출 잔액은 실적집계('15년~) 이래 최초로 전월대비 감소(2천억원)

* '19.1~5월까지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12.8조원으로, 전년 동기간(+27.4조원)의 절반 이하

❷ 거래자 본인확인 등을 통해 과열된 가상통화 거래 안정화

*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 ('18.1월) 46.7% → ('19.7.4일) 2.2%

❸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공급, 청년 맞춤형 저리 전·월세 대출공급, 유한책임 정책모기지 공급 대폭 확대 →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기여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누계): ('18.9월) 2,781억원 → ('19.5월) **7,878억원**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누계): ('18.9월) 10,643억원 → ('19.5월) **36,928억원**

청년 전월세 대출공급실적 : 5.18일 출시 후 6.21일까지 **1,106억원**

②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물꼬 확대

❶ 중소기업 대출액이 700조원에 근접, 기업대출 비중도 증가세

<예금은행 中企 대출잔액(조원)>



<기업대출/GDP 비중(%)>



❷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18.4월~) 후 신·기보는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없이 13.6조원 공급*, 기존 연대보증 8.4조원 감축

* 연대보증 폐지 실적('18.4~'19.5) : 신규·증액 13.6조원, 기존보증 감축 8.4조원

❸ 기은·신보를 통해 '19.2분기 중 창업자금 22.7조원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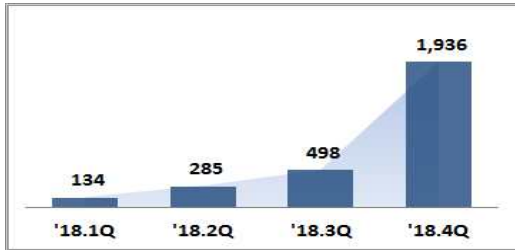
④ 동산금융이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 추세

- '18년 동산담보대출 신규 공급액이 전년 대비 4배 수준으로 증가, 대출잔액도 2배 가량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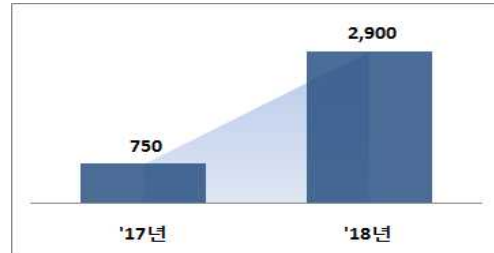
* 신규공급액/대출잔액(억원) : ('17년) 750 / 2,277 → ('18년) 2,900 / 4,023

- '19.1분기 중 동산담보대출 증가세 지속(960억원 신규공급)

< 분기별 동산담보대출 신규공급액 >



< 연간 동산담보대출 신규공급액 >



⑤ 성장지원펀드 조성(2.94조원)으로 혁신기업 스케일업 뒷받침

* '18년 펀드 2.94조원 조성 → '19.6월 현재 72건(총 4,947억원) 투자 집행

⑥ 중소조선·기자재 및 자동차부품업체 등 주력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총 3.7조원 신속 지원('18.11월~'19.6월말)

* [중소조선·기자재업체] 제작금융 235억원, 만기연장 17,014억원,
[자동차부품업체] 우대보증 5,394억원, 만기연장 14,476억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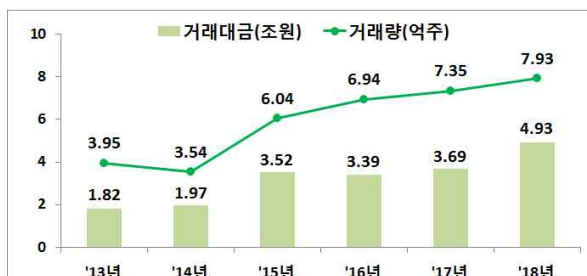
-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등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도 조기 집행(총 1조원 지원, '19.1월~'19.6월초)

⑦ 코스닥 개장('96.7월)후 기술특례상장 역대 최고수준 기록, '18년 코스닥 시장 일거래량 전년 대비 34% 증가

* 연도별 기술특례상장 기업(社) : ('15년)12→('16년)10→('17년)7→ ('18년)21

* 일거래대금(조원) : ('15년)3.5 → ('16년)3.4 → ('17년)3.7 → ('18년)4.9

< 코스닥 거래량 추이 >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자금조달 추이 >



3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 효과도 점차 가시화

1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 高금리 대출감소 및 평균 대부금리 하향

* 24% 초과 대출규모 : ('17.12말) 17.2조원 → ('19.3말) **5.8조원** (△66.3%)

** 고금리업권 신규 신용대출 금리 : ('17.12월) 19.2% → ('19.3월) **17.6%**(△1.6%p)

*** 대부업 평균금리 : ('17.하) 21.9% → ('18.하) **19.6%** (△2.3%p)

2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62.7만명 재기를 적극 지원

3 채무연체(우려)자 대상 금융권 자율의 사전 채무조정도 활성화*

* 금융권 자율채무조정 : ('18.1Q) 8.8만건 →(3Q) 9.3만건 →(4Q) 14.7만건

4 우대수수료를 적용 확대 등으로 약 1.4조원의 카드수수료 경감

* ¹⁾('19.1월)전체 가맹점의 96% 우대수수료를 적용 및 수수료율 인하(연 7,800억원 절감)

²⁾('19.1월)온라인사업자·개인택시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연 1,700억원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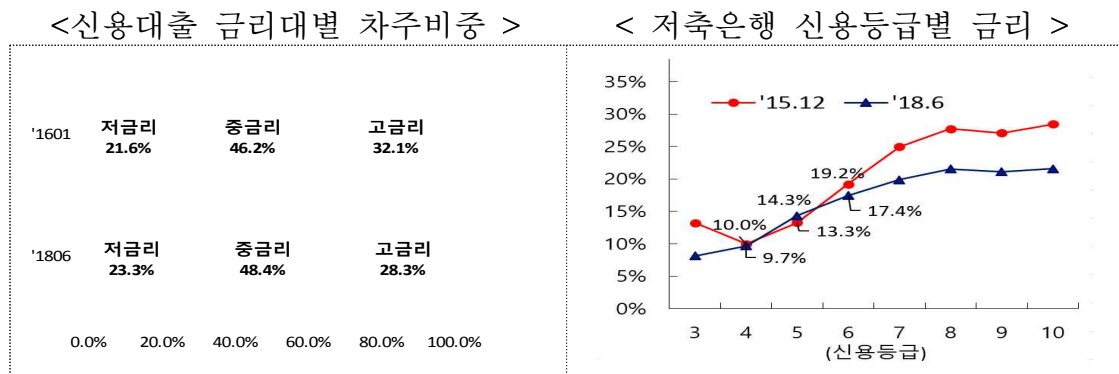
³⁾('18.7월)벤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24만개 가맹점에 총 1,500억원 절감 등

⁴⁾('17.7월)우대구간 확대(연매출액 3억원→5억원 이하)로 총 3,500억원 절감 등

5 '19.1~6월 중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대출 총 1.4조원 지원

6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 제고

- (1) 중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시장 저변 확대 → 신용대출시장에서 중금리 차주 비중 증가('16.1월 46.2% → '18.6월 48.4%)



- (2) 60만명 이상 서민대출 이용자·취약계층 등이 연간 100억원 가량의 은행 ATM 수수료 절감 혜택

- (3) '19.6월까지 약 20만명의 병사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제대 이후 학업·취업 등 준비 중

- (4)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마중물 자금공급도 대폭 확대

* '19년 중 3,230억원 규모의 자금공급 계획('19.5월말 현재 1,852억원 공급)

4 금융그룹 감독, 회계분야 등 엄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 ① 논의시작 10년만에 금융그룹 감독제도 시범 가동 → 그룹차원 리스크 점검·관리 관행 형성(그룹위험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
- ② 회계개혁을 통한 회계 투명성·신뢰도 제고(대내외 평가)
 - * 아시아나 항공 재무제표 한정의견은 회계판 '미투'(중앙, 3.30), 최근 한국의 엄격해진 회계감사가 투자자들에게 조기경보 역할(Bloomberg, 4.19)
- ③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기관투자자가 100개('19.6월말 기준)로 급증
- ④ 금년 중 200개 이상 기업(코스피 기준)이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 시장감시·평가 등을 통해 지배구조 투명성 확립관행 정착
- ⑤ '올빼미 공시' 강력 대응 → 부적절한 관행 대폭 감소
 - * ('19.2.28, 삼일절 연휴 직전) 289건 → (5.3일, 어린이날 연휴 직전) 45건

5 핀테크 등 금융산업 혁신과 경쟁 활성화의 기반 마련

- ① 금융규제혁신지원법 시행('19.4월) 직후 혁신금융서비스를 총 37건 지정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 조기 가시화
 - * (4.17일) 9건, (5.2일) 9건, (5.15일) 8건, (6.12일) 6건, (6.26일) 5건

< 주요 혁신금융서비스 >

- ①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 제공
- ②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 → 개인 주식대차거래 기회 제공
- ③ 「해외여행자보험」계약시 「스위치(on-off) 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 제공

- ②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비대면 계좌개설·대출, 간편송금, 정기예금 금리 등의 분야에서 은행간 경쟁 촉발
- ③ 경쟁도평가 등을 거쳐 금융업 신규 인허가 추진(최대 6개사)
 - * 온라인전문보험사 예비허가(1개사, '19.1월) → 부동산신탁사 예비인가(3개사, '19.3월)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추진(2개사 이하, 연내)
- ④ 핀테크 활성화 등에 힘입어 간편결제 이용액이 2년간 3배 가량 대폭 증가('16년 26.9조원 → '18년 80.1조원)

IV. 향후 중점 추진과제

- ◇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민생 어려움 등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적극적 역할 확대
-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성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를 가장 우선하는 금융시스템을 확고히 정착
- ◇ 핀테크 등 금융혁신 확산 및 성과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 ☞ 국민들이 '달라진 금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손에 잡히는 구체적 과제 위주로 금융혁신 노력을 한층 가속화

① 투자 활성화, 혁신금융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❶ 투자·수출부진 등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여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약 1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4.7조원)하고, 新산업 분야 등에 대규모 자금공급(6.6조원)
 - * 산업구조 고도화 3조원, 환경·안전투자 2.3조원
 - ** 시설투자 특별온렌딩 1조원, 청정환경 보증 0.6조원, 신산업분야 자금 5조원
 - 제조업·수출기업 유동성 지원(3.1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1.1조원), 기업구조조정 분야(1.2조원)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
- ❷ 기업의 다양한 이종(異種)자산을 포괄하여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
- ❸ 기업 성장가능성에 기반한 동태적 여신심사 인프라 구축
 - * 기술·신용평가 일원화, 기술평가시 성장성·미래 기술창출력 등도 반영, 현금흐름·장래매출 기반 여신상품 개발 등
- ❹ 대규모 성장자본 공급, 자본시장 세제정비 등 모험자본 활성화

② 소비자 중심으로 포용적 금융 외연 확장

- ❶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강화, 소비자 중심 금융시스템 구축, 서민 자산형성 지원 등 금융포용성 강화 종합대책 마련

*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민관 역할분담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도 강구

-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Ⅱ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20년 출시)

- ❷ 금융소비자보호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추진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중)

- ❸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거래 편의 확대**, 보험 사업비 개편***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 추진

* 보험약관, 대출금리, 채권추심, 착오송금 등 민원이 집중 제기된 분야의 관행 개선

**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카드이동 서비스, 제2금융권 숨은 금융자산 찾기 등

*** 불완전판매 및 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 사업비·모집수수료를 개편

- ❹ 청년에 대한 전·월세 지원, 고령층 주택연금 개선*, 금리구조 개선 정책모기지 공급** 등 실수요 계층의 주거부담 경감 지속

* 가입연령 하향, 가입주택 가격제한 현실화(시가 9억원→공시가격 9억원)

** 변동금리 및 변동금리로 전환이 임박한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

- ❺ 채무연체 중인 자영업자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한 '채무조정 + 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마련('19년 3분기)

③ 핀테크 등 금융혁신 성과창출 및 확산

- ❶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마련("핀테크 2단계 지원전략")

* (예) 핀테크 투자활성화 방안,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맞춤형 규제개혁 등

- ❷ 금융결제 플랫폼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업 체계 전면개편 추진

* (예) 전자금융업 규율체계를 업종별→기능별로 전환, 오픈뱅킹 제도화, 고객의 지시를 은행 등에 통합·전달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 도입 등

③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거래소 등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신정원 정보를 핀테크, 중소기업사, 교육기관 등이 활용
[데이터거래소] 공급자-수요자간 비식별정보·기업정보 등을 거래(금융보안원)

④ 금융산업 내 인터넷전문은행 등 혁신사업자의 진입 촉진

* (예)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소액단기보험사 제도도입 등

⑤ P2P대출이 건전하게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 추진

⑥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조기 창출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해 과제심사 간소화·자금공급·컨설팅 등 사업화 종합지원

4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하여 공고한 금융안정 유지

①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노력 강화

*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안정화, 부동산임대업 대출편중 완화 등

② 부동산 시장 여건변화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PF·채무보증·펀드·신탁 등 쏠림금융부문의 부동산익스포져 데이터 수집·관리 및 잠재리스크 분석

③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 확대(1→2조원)하고, 자동차·조선·기계 등 구조혁신이 시급한 분야에 우선 배정*

* 총 조성규모의 20%(최대 1조원) 범위 내에서 산업별 섹터펀드 운영

④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지원 강화

- 캠프를 통한 자산매입후재임대* 프로그램의 지원기간 확대, 초기 임대료 납부유예 등 회생기업의 실질적 수혜범위 확대 추진

* (예) 임대기간 5년 → 최장 10년으로 확대 / 임대료 납부 최장 2년 유예 지원

⑤ 미·중 통상마찰,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 리스크 확대로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안정 노력 강화

* 한은·금감원·국금센터 등 관계기관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

별첨1

하반기 정책금융 지원과제(16.7조원)

1. 기업 설비투자 촉진(11.3조원)

과제명	지원내용	공급규모
신산업분야 자금공급 (산은·기은·수은·신보·기보)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新 산업 분야에 정책금융을 5조원 추가공급	5조원
시설투자 특별온렌딩 (산은)	▶ 산업은행 특별온렌딩을 신설하여 시중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시설투자 지원 ① (지원대상) 주력산업 및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② (지원한도) 업체별 300억원, 건별 150억원 ③ (금리우대) 최대 0.45%p 인하	1.0조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산은·기은)	▶ 중소·중견기업의 주력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 진출 지원 ① (지원대상) ❶설비·기술투자, ❷대중소 상생투자, ❸사업재편 분야 중소·중견기업 ② (지원한도) 시설 2,500억원, 운영 300억원 ③ (금리우대) 0.5~0.7%p 감면	3조원 (‘19.上 1조원 공급 → ‘19년 총 4조원)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 (산은·기은)	▶ 미세먼지 대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 설비 교체 등 환경·안전분야 시설투자 지원 ① (지원대상) ❶환경·안전분야, ❷노후설비·건축물 개선, ❸민간생활 SOC 분야 중소·중견기업 ② (지원한도) 시설 1,000억원, 운영 200억원 ③ (금리우대) 1.0%p 감면	1.7조원 (‘19.上 0.3조원 공급 → ‘19년 총 2조원)
청정환경 설비 특별보증 (신보·기보)	▶ 특별보증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 청정환경 설비의 생산·도입·개발 기업을 지원 ① (지원대상) 청정환경 설비 개발·생산·도입 중소기업 ② (보증한도) 운전 30억원, 시설 100억원 ③ (우대사항) 보증비율 상향(85% → 90%), 보증료율 인하(0.3%p ↓)	0.6조원

2. 제조업·수출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3.1조원)

과제명	지원내용	공급규모
수출보증(신보·기보)	▶ 수출활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신·기보 보증규모를 확대	1.1조원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산은)	▶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지방소재기업 등에 저리의 운영자금 지원 ① (지원대상) 주력산업 및 혁신성장분야 중소·중견기업 ② (지원한도) 중견 70억원, 중소 50억원 ③ (금리우대) 최대 1%p 인하	2.0조원

3.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1.1조원)

과제명	지원내용	공급규모 (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대출 확대 (기은)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초저금리대출* 규모를 1.8조원에서 2.3조원으로 확대 * 기준금리만 적용, 1인당 한도 2억원	0.9조원 (‘19.上 1.4조원 공급 → ‘19년 총 2.3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매출정보 기반 대출 공급(기은)	▶ 미래 발생가능한 카드매출수익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카드매출대금 입금액으로 대출금 자동 상환 * 1%p 금리인하, 1인당 한도 3억원	0.2조원

4. 구조조정(1.2조원)

과제명	지원내용	공급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	▶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조선 등 구조혁신이 시급한 분야에 우선 배정	1조원 (‘19.上 1조원 조성 → ‘19년 총 2조원)
캠코 S&LB	▶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캠코S&LB프로그램 지원기간 및 수혜범위 확대 추진 * (예) 임대기간 5년 → 최장 10년	0.15조원
회생기업 자금지원 (캠코)	▶ 캠코에서 회생절차 기업에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	0.05조원

별첨2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현황

	기업명	신청내용	비고
1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	1차지정 (4.17)
2	디렉셔널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3	NH농협손해보험	On-Off 해외여행자 보험	
4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5	신한카드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6	비씨카드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7	신한카드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8	페이플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9	루트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 서비스	
10	우리은행	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	2차지정 (5.2)
11	카사코리아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12	코스콤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	
13	핀다	데이터 기반 원스탑 대출 마켓플레이스	
14	비바리퍼블리카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신청 서비스	
15	NHN페이코	중금리 맞춤대출 간단 비교 서비스	
16	핀테크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	
17	핀셋	빅데이터를 이용한 모바일 대출다이어트 플랫폼	
18	더존비즈온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 이용 AI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19	핑크	통신정보 결합 신용평가 제공 서비스 및 금융 회사별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	3차지정 (5.15)
20	페르소나시스템	AI 로보텔러 보험상품 상담·판매 서비스	
21	페이콧	스마트폰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이용하는 결제 서비스	
22	한국NFC		
23	마이뱅크		
24	핀마트	맞춤형 대출정보 비교 플랫폼	
25	팀윙크		
26	비씨카드	신용카드 기반의 개인간 소액 송금 서비스	
27	빅밸류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평가 서비스	4차지정 (6.12)
28	공감랩	빅데이터 기반 자동가치산정시스템	
29	페이먼트	O2O 사업자의 높은 카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결제정산대행 서비스	
30	코나아이	모바일 앱을 통한 계모임 플랫폼	
31	지속가능발전소	인공지능 및 非재무 기반의 중소기업 지속가능성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32	세틀뱅크	SMS활용 간편 계좌등록 현금결제 서비스	
33	NH농협손해보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e-쿠폰	5차지정 (6.26)
34	아이콘루프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35	파운트	분산 ID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36	머니랩스	대출상품 비교 및 챗봇 중개 서비스	
37	레이니스트	대출조건 협상 및 비교 서비스	

별첨3

주요 정책 사례 상세내용

1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하여 공고한 금융안정 확보

< 9.13 부동산대책에 대한 IB 보고서('18.9.13) >

"Targeted tightening measures on housing market to ease financial imbalance risks" (Citi)

"Strong measures to stem surging Seoul house prices" (HSBC)

"New housing cool-down measures: A full-court press by government" (BoA)

"Housing measures- What more to expect?" (JPM)

< 가계부채 관리 관련 IMF 미션단장 발언 >

'19년 IMF 연례협의 후 IMF 미션단장 1문1답 중 ('19.3월)

가계부채는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다. 한국의 거시건전성 조치들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국이 다른 국가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다. 타이트한 거시건전성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2 혁신·新성장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

<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수혜 사례 >

의과대학 의학유전학 교수인 A씨는 약 7년간의 연구 끝에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개선제 개발에 성공하였으나 본격적인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8.4월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되면서 실패의 부담없이 사업화 자금 7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후 신제품 출시에도 성공하였다. A씨는 연대보증이 폐지되면서 학계 등에서 연구성과를 축적한 전문가가 창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 성장지원펀드 지원 사례 >

다수의 혁신성장 간담회('17.10월, '18.10월 등)에서 기업인들은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성장자금 공급이 필수적"임을 수차례 강조하였다. 이에 정부는 혁신창업기업에 대해 모험자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키로 하였다.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 A사는 혁신모험펀드를 통해 170억원을 투자받았다.(18.12월). 이와 연계하여 산업은행을 통해 10억원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았고(19.2월), 매출 증가에 대비한 물류창고 증설자금(약 50억원)도 지원받을 예정이다.

< 현장목소리로 코스닥시장 제도 개선 >

코스닥 상장 준비기업 A사는 초기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에 필수인 코스닥 상장 절차와 관련하여 **“바이오 업종은 신약개발까지 임상 등 엄청난 R&D 비용이 소요되어 상장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꼭 필요한데, 상장심사 기준에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건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18.4월)하여 혁신기업 상장 저해요소를 폐지하는 등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 현장목소리로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의 대표 A씨는 크라우드펀딩 전문가 간담회(18.6월)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모집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정부는 이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기업이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의 연간한도를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다.

< 동산금융 활용 사례 >

수산물(활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A는 **뛰어난 영업력에 비해 자본력이 부족하지만 임차사업장에 본인 소유의 동산(냉장장치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 '18년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물고기 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수산물의 신선 보관 등 **냉장장치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었다.

'18.5월에 정부가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모든 기업의 동산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B은행으로부터 **냉장장치 등을 담보로 대출을 적기에 지원**받아 냉장장치를 추가로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3]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등 소비자 중심의 금융 구축

<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사례 >

B씨는 2000년에 보험에 가입한 후, **'00년 5월에 사고를 당해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았다.** 당시 1회차 보험금 5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보험금 지급이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사실은 매년 500만원씩 10년간 지급), **주소가 변경되어 추가적인 안내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B씨는 남편과 사별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정부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수급자 자격이 없어지면서 자녀에게 5~10만원의 용돈을 받으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숨은보험금 찾아주기'를 통해 모르고 있던 보험금(9,700만원)을 받게 되었고, 어려운 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다.**

< 신용회복프로그램 수혜 사례 >

A씨(여)와 남편은 3년전 결혼을 하면서 결혼자금과 출산비용 등을 마련하고자 거래하던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남편이 도박에 빠져 홀로 가정을 이끌게 된 A씨는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근근히 이어 나가게 되었다. 부족한 살림에 연체가 시작되었고, 돌려막기로 빚이 불어나면서 급기야 금리가 연 66%에 이르는 사금융 대출까지 손을 댔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고, 상담 후 3000만원이 넘는 빚을 조정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사금융권 대출은 국민행복기금의 바뀐드림론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되었다.

서민금융을 통해 희망을 되찾은 A씨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고 홀로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벌면서 오늘도 곳곳이 살아가고 있다.

4 원칙이 바로 선 신뢰의 금융 기반 마련

< 회계개혁, 2017 10대 뉴스에 선정 >

매일경제 “회계개혁, 2017 10대 뉴스에 선정”

‘17.10.31일 공포된 회계개혁법(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의 핵심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도입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으로 전체 상장사 등은 9년을 주기로 6년은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하고, 나머지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의 틀이 전환됨에 따라 외부감사의 독립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5 핀테크,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권 경쟁과 혁신 가속화

<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맥킨지 언급 >

맥킨지 “OOO뱅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모바일뱅크”

맥킨지가 15개국 금융소비자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한국 금융 소비자가 PC나 모바일을 통한 ‘디지털 뱅킹’ 침투율이 전체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특히 한국 소비자의 90%는 OOO뱅크나 OO뱅크처럼 은행 지점이 전혀 없는 ‘디지털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OOO뱅크에 대해 맥킨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모바일뱅크” 라고 설명하였다.